



# 기억과전망

Memory & Vision

2015년 겨울호 (통권 33호)

을 하반기에도 한국 사회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몸살을 앓았다. 그중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노동개혁 문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등을 둘러싼 국가와 시민사회 간 그리고 시민사회 내의 갈등과 혼란은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우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정부의 시각에서는 ‘올바른’ 역사와 ‘왜곡된’ 역사의 대립으로 간주된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서술하고 또 정부가 검인정한 역사 교과서의 거의 대부분이 ‘왜곡된’ 역사책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논리를 따르다 해도, 과거 ‘잘못된’ 역사 서술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최종적으로 이를 검인정해준 정부에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세간의 지적처럼 ‘올바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이 올바른 역사인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정의내리고 규정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집단과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반대하는데도 불도저식으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가 자신의 존립기반인 시민사회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개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처리 방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선진국의 경우 노동개혁

같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노사정 삼자 협의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내의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 절차가 반드시 있어왔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민주주의적 숙의과정을 간단히 무시하고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속에서 노동유연성만이 강조될 뿐, 국민들의 고용문제와 생활안정성,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둘러싼 의혹 또한 국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회의적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정부는 계속 말바꾸기를 하고 있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등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엄청난 국책사업 비리와 연속선상에 있다.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호지부지되고 있는 반면,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누리사업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예산은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정부의 실종, 국회의 실종 그리고 정당정치의 실종을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하버마스에 의하면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론장(public sphere)’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즉 자유로운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이성적·합리적 소통을 하고 공공성의 문제를 논의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사회에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이 영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공론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류 언론은 자신의 사명을 저버린 지 오래이다. 이 점에서 공론장의 회복,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보다 진지하게 새로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번 호에는 총 11편의 논문과 1편의 회고록이 게재되었다. 우선 특집으로 한국의 현단계 민주주의를 진단하는 2편의 논문을 실었으며, 일

반논문으로는 평소보다 많은 9편의 논문을 실었다. 회고록은 유신체제 시기 독일에서의 민주화운동을 다룬 글이 실렸다.

먼저 두 편의 특집논문은 각자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의 현 단계 민주주의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정상호는 후기산업화 시대의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확산 속에서 ‘좋은 시민’의 의미가 과거 준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의무적 시민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참여적 시민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적 과제 역시 정부의 신뢰 회복, 공천방식의 혁신과 같은 제도 개혁이 아니라 참여와 자기 표현을 중시하는 ‘좋은 시민’들의 열정과 이해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지방수준에서만 도입된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의 중앙정부 수준으로의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선거운동의 제한 철폐, 로컬 파티의 전격 허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정일준은 한국이 자유주의 통치성이 미숙한 가운데 신자유주의 통치성(neoliberal governmentality)으로 과속질주함으로써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두 보수정권에서 한국의 국가는 권위주의적인 신자유주의 통치성(authoritarian neoliberal governmentality)이라는 특성을 보인다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를 ‘민주-반민주’라는 익숙한 단일축에서 사고하는 것은 위험하며, 사회통치하기 프로젝트(governing society)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정권에 맞서고 시민을 강화시키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단순히 정치적 제도 개선 또는 국가-시민사회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보다 큰 틀의 복합적인 사회경제적·정치적 체제의 시각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호의 일반논문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 글들이 다수 눈에 띈다.

먼저 함충범의 글은 해방기 ‘경찰영화’를 다루면서 ‘해방’이라는 사건이 한국 근현대사에 미친 영향만큼이나 한국영화사에 파급된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특히 해방 후 경찰의 정치적 입지와 사회적 인식, 냉전 고착화의 흐름 속 공권력 내 핵심 기구로서의 위상 재정립 및 대중적 문화 통제에 대한 시도 등이 경찰영화의 제작에 복합적으로 작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해방공간에서의 문화적 헤게모니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특수성이 영화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 글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신체제기 광주·전남의 교육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이영재의 글은 특히 1970년대 후반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에 등장한 ‘삼봉조합’이라는 조직적 결사와 교육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양서협동조합’의 활동내용과 주체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엄혹한 유신체제 하에서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이 반유신 투쟁을 통해 전국적인 교육민주화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유신체제기 광주·전남의 교육민주화운동사에서 독특한 형태로 제기된 조직적·실천적 양상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사의 체계적인 정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김종엽의 글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사례로 삼아 공감의 서사적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소년이 온다』는 1980년 광주에서 한 소년 그리고 그 소년과 이웃한 이들이 겪은 죽음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인데, 김종엽은 이 소설에 대한 조명을 통해 우리사회의 공감의 문제가 민주사회의 중요한 토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신의 평화를 위해 타자를 외면하고, 물화하고, 타자가 수행하는 의미의 복원과 이해의 도정을 함께하지 않는 한, 상실된 자신의 평화 또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광주의 끔찍한 고통이 다른 형태로 여전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원인은 우리가 광주의 고통을 “더 이상 모욕할 수 없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바로 여기에 공감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은 기존의 사회과학적 인식과는 다른 새로운 성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어서 전재호의 글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사적 의미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2000년대 이후 북한 인권 문제가 한국정치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인권 및 반공 담론에 대한 보수/진보 세력의 입장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양 세력은 각각 한계를 드러낸다. 즉 권위주의 시기 인권의 상대성을 주장했던 보수 세력은 2000년대에는 인권의 보편성을 내세워 북한 인권 문제 개입을 정당화한 데 비해, 과거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했던 진보 세력은 이제는 인권의 상대성을 내세워 개입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결국 진보가 북한 인권에 대해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입장을 고려하면 궁색한 변명으로 들리고, 여전히 국내 인권에 대해 불개입으로 일관하는 보수가 북한 인권에 대해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허언(虛言)’에 불과하다는 날카로운 지적은 향후 북한 인권 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보다 균형 잡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운동의 프레임 분화에 주목하고 있는 안리라의 연구는 한국의 통일운동이 1987년 이후 국내·외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민족·민주프레임에서 시민·평화프레임으로 분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 글에서는 프레임 분화 양상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운동정체성과 운동이슈를 두 개의 축으로 하여 통일운동을 유형화하면서, 그중에서도 민중지

향적 평화통일운동, 시민지향적 통일운동을 시민·평화프레임을 구성하는 새로운 유형의 통일운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통일운동의 프레임 분화를 추동한 정치적 계기로는 국제적 차원의 탈냉전 질서의 형성, 세계화의 확산 그리고 국내 요인으로 민주화 확대 및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향후 통일운동 전개의 장기적 방향을 예측하는 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수남·심성보의 글은 사회적 배제의 극단에 있는 노숙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노숙인들이 역사(station)를 중심으로 노숙공간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통치성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영등포역사와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노숙공간을 참여관찰하면서 노숙공간이 구성되고 (재)생산되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려 노력하고 있다. 즉 노숙공간은 노숙인을 비롯한 사회복지단체, 행정기관, 지방정부, 민간자본 등 여러 사회적 주체들 간의 다양한 경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생산된 산물이며, 이들은 서로 갈등적 공생관계 혹은 상호의존적 갈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노숙공간을 권력투쟁과 상호공생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띤 장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노숙공간은 노숙인다움(homelessness)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그 뒤에는 일반 시민들과 그들을 사실상 분리하여 사회 전체의 안전과 도덕성을 유지하려는 국가권력의 통치기술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병천·박태현의 글은 세월호 문제와 국가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세월호 참사의 발발과 이후 대응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기조가 어떤 복합적 내용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박근혜 정부가 과거 적폐의 청산약속을 깨고 규제완화로 회귀함으로써 그 부메랑 효과로서 세월호

참사를 자초했다고 보면서 신자유주의적 요소와 개발독재적 요소의 결합에 대해 분석한다. 이어 참사 이후 세월호 국면 타개를 위해 취해진 경제 활성화 정책의 검토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규제완화 일변도로 나아감으로써 무책임 국가의 속성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위협에 빠트리고 있는지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박형준의 논문 「권력자본론의 관점에서 피케티 급진화하기」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특히 이론적 깊이와 학문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그에 따르면,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 경향이 자본주의적 발전에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지만, 자본주의의 장기동학에 관한 그의 이론화 작업은 『21세기 자본』이란 책 제목이 불러일으킨 기대를 충족시키진 못했다. 즉 실증적 데이터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하는 과정에서 주류경제학의 이론틀을 사용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 자본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류경제학 방법론의 근본적 문제점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글은 피케티의 이론적 실패가 자본 개념과 가치이론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재에 기인했다고 보고, ‘권력자본론’이란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자본주의 동학을 설명함으로써 피케티 자본론의 이론적 맹점을 극복하고, 그가 제시한 실증적인 분석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려 한다. 주류경제학과 좌파정치경제학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시도로서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과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논문의 마지막은 송경재의 글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local-based cyber community)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한국의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인 <문래·양평·영등포·당산 이아



기(미드타운 스토리, <http://cafe.naver.com/dasmora>)를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사회적 자본과 지역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커뮤니티 내의 회원들의 정보 신뢰도, 운영진 신뢰, 호혜성의 규범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네트워크 참여가 활발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사회적 자본 형성의 토대가 되고 결국 시민적인 참여를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지역 민주주의 발전 전략의 모색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는 회고록을 한편 실었다. 독일에서의 민주화운동에 관한 이삼열의 글인데, 1970년대 유신독재하에서 그가 직접 참여했던 ‘민주사회건설협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약 10여 년의 민주화운동 과정을 회고하고 있다. 당시 남북 분단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자유민주국가들의 여론과 국제적 압력이 한국 민주화의 커다란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해외 민주화운동의 역할과 의미를 반드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고록은 각별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회고록의 나머지 절반은 다음호에 실을 예정이다.

소중한 글을 써주신 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마무리해야 할 일도 많을 텐데, 바쁜 시간을 쪼개어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를 표하고 싶다. 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글들을 깔끔하게 편집, 출간하는 수고를 해주신 책임편집자 최종숙 박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옳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어 나가기 위해서는 객관적·성찰적 해석 또한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기억과 전망’은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쓰~~

2015년 12월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윤도현 씀